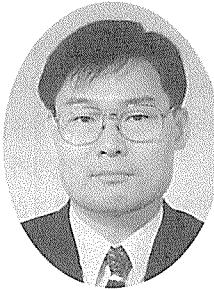


'96년도 정유부문 경영실태 분석과 향후전망



신 용 삼

< 현대정유 업무1팀 과장 >

I. 머리말

지난 96년은 1단계 석유산업 자유화를 앞둔 마지막 징검다리의 해였다.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한 해이기도 한 1996년, 이제 전 산업부문의 대외경쟁력제고가 보다 더 절실해졌으며, 특히 대규모 장치 산업이며 국가기간 산업으로서 그 동안 대내외 경쟁경험이 적었던 정유산업의 경우 더욱 새로운 각오와 굳건한 내실화가 요망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국가경제의 세계화·개방화 추세를 맞이하여, 석유산업이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경주해왔다. 석유산업이 이미 자유화되어 있거나 또는 자유화가 진행중인 세계 각국의 선례와 운용현황 등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에 가장 적합한 석유산업 자유화 방안을 계속 모색해왔다. 1994년에 도입된 유가연동제가 그 한 예로서 지난 96년까지 3년간의 시행을 거

쳐 97년 유가자유화가 단행되었다. 유가연동방식도 처음에는 휘발유, 등·경유 및 B-C유의 가격이 동율로 조정되는 원유가연동제이던 것이 제품별 계절적 요인 등이 반영되는 국제제품가연동제로 바뀌었으며, 국내 유가구조 또한 단계적으로 국제제품 가격구조에 접근시켜 왔다.

〈표 - 1〉은 그러한 노력의 단면들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96년은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국내 정유사의 총매출액이 95년에 비해 5조7천억원이 늘어난 23조2천9백억원이었다. 이중에서 정유부문 매출액은 21조5천9백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런데 정유부문 세전손익은 314억원으로 매출이익율이 0.15%에 불과하여 제조업 평균매출이익율인 3.88%(95 세전실적)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저조한 경영실적의 원인이 과연 어

경영분석

디에 있는 것인지를 고찰하여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대외개방을 앞둔 국내 정유산업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표 - 1〉 석유산업관련 주요일지

	주요내용
1994. 1	· 유가연동제 실시 (원유가 연동제)
1994.11	· 유기연동방식 변경 (원유가 연동제 → 국제제품가격연동제)
1996. 1	· 특소세 (교통세) 종량제 실시
1996.7	· 휘발유, 등유, 경유에 교육세 부과 ※ 교육세 : 특소세 (교통세) × 15%
	· 유가연동공식중 원유도입가 (FOB) 산정방식 개선
	※ (OMAN + DUBAI) 연동기준 → TAPIS 추가
1996.10	· 원유USANCE 수입기간 (B/A 일수) 연장 ※ 내수용 : 60일 → 90일
	수출용 : 150일 → 180일
1996.12	· 휘발유 교통세 20% 인상
	· OECD 가입
1997. 1	· 유가자유화, 수출입자유화, 판매업 등록제 실시
1999. 1	· 정체업 신규참입 자유화, 대외개방 (예정)

2. 96. 정유부문 경영실태 분석

국내정유사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부문은 정유업 이외에도 윤활(기)유업, 석유 화학, 발전, 유전개발 등 다양하다. 이중에서 국가기간산업이며,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정유부문은 정부의 물가안정기조 유지에 크게 기여해 오면서 가장 늦게 산업 자유화과정을 맞이하고 있다.

〈표 - 2〉 국내정유사의 최근 5년간 정유부문 손익추이

(단위 : 억원)

	1992	1993	1994	1995	1996
A. 정유부문 손익 (계산)	△16	749	△238	△841	314
B. 허용 이익	1,589	1,732	1,939	2,199	2,433
C. 차이 (A-B)	△1,605	△983	△2,177	△3,040	△2,119

그동안 정유부문의 경영실적은 〈표 -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우 저조하다.

국내유가 산정시 정유부문 투자자기자본의 세후10% 기준으로 반영해주고 있는 허용이익에도 훨씬 못 미칠 뿐더러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는 연도도 찾아지고 있다.

96년도의 정유부문 경영실적은 314억원으로서 허용이익 대비 2,119억원 손실이다. 특히, 정부유가관리 대상인 단순경제부문 (고도화부문 제외)의 손실은 3,000억원을 상회하였다.

이러한 막대한 손실발생에는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주요 요인 몇가지를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96년도의 경우 급격한 환율 상승이 가장 어려운 경영여건이었다.

연초 777.7원/\$ 이던 환율이 연말에는 847.5원/\$로 무려 69.8원/\$ 가 치솟았다. 원가비중이 80%를 넘는 원유수입대전 (USANCE)은 물론,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는 경제시설 증설자금의 상당부분이 달러화 부채이어서 환율상승 부담은 실로 엄청나다.

USANCE 평잔에 대한 환차손은 국내유가 산정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는 유가연동대상유종인 휘발유, 등·경유, B-C유 등에 국한하여 원유수입 통관일 이후 환차손만 반영한 것이었고, Naphtha, 항공유, 아스팔트 등의 기타 유종은 가격전자가 전혀 되지 못했으며, 갈수록 비중이 커지고 있는 수출부문은 시장특성상 전기가 불가능하다.

둘째, 석유소비의 경질화·저유황화 추세에 부응키 위한 저유황 경질원유 도입 비중의 증대로 원유도입가격이 상승하였으나, 96. 상반기 원유도입가 추정식에는 이 요인이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손실이 누적되었다.

〈표 - 3〉 참조

셋째, 해양유류 오염방지를 위해 선령 20년 미만의 선박 또는 이중선체구조 유조선의 용선이 늘어나는 추세이어서 원유 수송운임이 상승하였으나, 유가상으로는 과거 실적이 계속 거치되어온에 따라 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 3〉 참조)

〈표 - 3〉 국내정유사의 96. 원유도입가 및 운임

(단위 : \$/B)

	실적	유가반영	차이
FOB	19.16	18.96	△0.20
원유운임단가	0.94	0.72	△0.22

넷째, 95. 8월 LPG가격 조정이후 국내 정유사의 복합원가는 원유가 및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LPG가격은 정부고시가격에 묶여 고정 관리됨으로써 원가 상승부담을 가격에 전혀 전가하지 못함에 따라 막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 (〈표 - 4〉 참조)

〈표 - 4〉 국내정유사의 96. 평균복합원가

(단위 : 원/B)

	1996. 평균	1995. 8월	차이
복합원가	21,880	17,167	△4,713

끝으로, 95. 12월에 95. 표준경제비가 국내 유가에 지연반영된 후, 96. 표준 경제비는 96년중 산정 및 반영이 보류됨으로써, 물가상승 및 임금상승 등에 따른 경제비 인상분의 유가 미반영으로 손실이 추가된 점을 들 수 있다.

3. 향후 전망

97. 1월 유가자유화가 단행된 이후 국내 정유사는 유종별 판매가격 산정시 적용되는 제반원가(비용)를 최근 실적으로 반영하려는 사별 노력을 경주해왔다. 즉, 원유

경영분석

도입가 및 환율 뿐만 아니라 원유운임 및 USANCE이자율도 매월 연동시키게 되었으며, 유가 반영 경제비도 1년4개월만에 물가상승 및 임금 상승 분 등을 반영하였고, 석유수출입 자유화와 연계하여 국내유가구조도 국제제품 가격구조에 100% 접근시켰다.

그리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책의 일환으로서 거래처와의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점차 개선하여 정상화시켜 나가려는 노력도 계속되고 있다. 또한 정부에서도 '97. 3. 25부로 LPG고시가격을 인상조치함으로써 그동안의 LPG판매에 따른 누적손실을 점진적으로 해소해갈 수 있는 길을 열었다.

그런데 유가 자유화 시행 이후 염려되어 왔던 정유사 간 가격경쟁이 97. 1월부터 불거져 나오기 시작하여 직매시장에서의 입찰경쟁이 치열해졌으며, 소매시장의 경우에도 휘발유가격 인하현상이 97. 4월부터는 전 정유사로 확대되어 금년도 손익악화의 주요인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휘발유 가격 인하경쟁이 주유소단계로까지 확대되어 출혈경쟁을 계속하고 있음에 따라 주유소 수익성 악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한편, 97년도에 들어와서도 환율상승세는 수그러들지 않고 급상승세를 지속하여 연초 환율 847.5원/\$에서 97. 3월말 901.5원/\$ 까지 치솟았으며, 97. 5월말에는 895.3원/\$로 47.8원/\$ 가 상승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도 환차손은 국내정유사에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환경규제강화와 국내석유소비의 경질화·저유황화 추세에 부응하여 중질

〈표 - 5〉 국내 총내수판매량 증감추이

(단위 : 천㎘)

	1996. 1/4분기	1997. 1/4분기	증감
휘발유	15,793	15,765	△28
등유	29,670	30,698	1,028
경유	51,100	45,278	△5,822
B-C유	44,451	45,863	1,412
계	141,014	137,604	△3,410

주 : 석유자료 97. 3월호 (석유협회)

유분해 및 틸황시설 등 고도화시설의 증설이 계속 될 전망임에 따라 막대한 자금소요가 지속될 전망이며, 이로 인한 감가 상각비, 지급이자 등의 급증으로 고도화부문의 경제성이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는 IEA(국제에너지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여 2005년까지 민간 비축의무량을 현행 내수판매량의 33일분에서 60일분으로 끌어올릴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비용부담도 꾸준히 증가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국가경제의 침체와 에너지소비절약의 결과이긴 하나, <표-5>에서 보는 바와같이 내수판매량이 오히려 줄거나 답보상태에 있는 점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4. 뜻는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유부문은 여러가지 제약 요인들에 의해 수익성이 저조하다. 따라서 국내정유사들은 제각기 그 탈출구로서 사업다각화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제, 정유부문도 자체적으로 투자한 자기자본에 대해 허용이익 또는 은행예금이자 수준 만큼은 이익이 나야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값을 받고 파는 것이 중요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중장기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격수준은 덤펑가격이 아닌,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해 이루어진 투자비, 운영비 및 정상이윤을 회수할 수 있는 적정가격이다. 덤펑가격은 소비자의 수요변화추세에 부응키 위해 필수적인 시설재투자재원을 잡식시켜 정유사의 대내외 경쟁력을 떨어뜨리므로써 결국 더 큰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대외개방에 대비 석유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통단계별로 적정가격을 지켜나가려는 노력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대기오염 저감정책에 따라 97. 7월부

터 공급되고 있는 0.5% B-C유와 '98. 4월부터 공급되는 0.05% 경유의 정유사 판매가격 산정시 추가원가 증가분을 당해유종 판매가격에 적정 수준으로 반영하므로써 과잉수요를 억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끝으로, 97. 1월 석유수출입 자유화가 된 이후 일반 기업이 석유수출입업등록을 마친 첫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동안 정부의 주요 석유정책중의 하나였던 소비자정책주의 기조유지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관세율 조정시 미국·일본·EU·대만 등 많은 외국의 사례와 같이 원재료인 원유관세율을 완제품 관세율 보다 낮게 차등화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

용어풀이

「소비자파산」

- 재산보다 빚 많은 사람에게 재생기회...
취업 등 제한 -

소비자파산제도는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진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함으로써 채무를 면제시켜주는 것이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파산한다고 해서 소비자파산으로 불린다.

신용카드 거래대금이나 대출금 등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 법원에 소비자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신청인의 재산을 실사한 뒤 재산을 빼돌린 흔적이 없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선고한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10년(채권소멸시효) 이상 채무가 계속된다.

채무자가 재산이 있을 때는 파산을 선고한 뒤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파산폐지 결정을 내린다. 재산이 없을 때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를 결정한다. 파산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채무가 면제되지만 금융거래불량자로 본적지에 통보되며 신원조회 때마다 나타나 은행여신이나 취업 등에 규제를 받는다.

소비자파산제도는 은행 등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성실한 채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채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을 경우 재산을 모아봤자 채권자들이 전부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상실시켜 인생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 신용대출기관으로서도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고려치 않고 매출 상승만을 위해 함부로 대출을 못할 것이라는 입법취지다.